

“간이검사, 신뢰성 없어… 회계감사 세무사 개방 강력반대”

한공회, 기존체계 복원 촉구
 민간위탁사업비 감사 수행에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화 초래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 필요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12일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회계 투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무사와 회계사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전담했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가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에게도 개방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회계감사 체계의 복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외부감사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를 간이 검증만 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

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간이검사 전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나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만이 민간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판결 후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회계감사 대신 간이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공회는 이러한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은 민간 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간이검

사는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할 수 없다”며 “증빙 확인만으로는 거래 실재성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 단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원상복구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레버리지 투자 증가… CFD 전년비 50% ↑

금투협, CFD잔고 1조6728억 집계
 내달 말 공매도 재개엔 수요 더 늘듯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레버리지 투자와 절세 수요의 증가로 차액결제거래(CFD)가 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명목 잔고(증거금 포함)는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라덕연 사태 이전인 지난 2023년 3월 말 잔고(2조7697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40% 낮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5월(1조169억원)보다는 64%가량 증가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중 하나다. 즉, 레버리지(부채를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를 통한

거래다.

절세 효과를 노린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증시 상승세도 CFD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지난 11일 기준 해외 CFD 매수 잔액은 5415억 원으로, 전년(1391억 원) 대비 4000억원가량 급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쫓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월 말 이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CFD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CFD는 상승은 물론 하락에도 베풀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CFD 매도 포지션이 제한된 상황이다. 증권업

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 관련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CFD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CFD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11일 100% 증거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 레버리지 CFD계좌에서만 가능하던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가 100% 증거금 CFD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교보증권은 국내 및 해외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매매하는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국내를 비롯한 해외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가능하다.

/원관희 기자 wkh@

상장회사협의회 “상법개정안, 위헌 소지”

전 헌법학회장에 검토 의뢰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하 의견서)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사에 대해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경제계는 남소위험 증가, 경영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헌법 제119조)과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이사의 행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 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의 의무에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사례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임과 달리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상법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타겟커버드콜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 지난달 말 1000억 돌파
 이후 단 10영업일 만에 성과 이뤘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코스피200과 장내 파생상품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타겟커버드콜 ETF로 지난 1월 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단 10영업일 만에 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은 연 15%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주단위 코스피200의 콜옵션매도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



가 상승할 경우 해당 지수 상승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 2%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코스피200종목의 배당금도 합산해 월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 배분 수익률은 연 17%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은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 인니법인 ‘지속가능 연계채권’ 발행

동남아 투자전문매체서 최우수상 수상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법인 ‘PT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앤드 스쿠리타스 인도네시아(KISI)’가 동남아시아 투자 전문 매체인 알파 사우스이스트아시아(Alpha Southeast Asia)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속가능 연계 채권 2024’ 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KISI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스펀도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남경훈 KISI 법인장은 “이번 수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리테일 및



(왼쪽부터) 요하네스 W. 에드워드(Johanes W. Edward) 스펀도 CEO, 시디크 바자르왈라(Siddiq Bazarwala) 알파사우스이스트아시아 CEO, 남경훈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